



<b>코스피</b> 2213.56 (+2.96)	<b>코스닥</b> 756.81 (+4.89)
<b>금리</b> (연고채 3년) 1.73 (0.00)	<b>환율</b> (USD-달러) 1142.10 (-2.60) (9일)



**[위기의 유통가]**  
한심한 유통규제 강화  
온라인 파고 덮치는데  
대형마트 옥죄기  
03

# 조양호 회장 타계로 관심 높아진 '경영권 승계' 상속세에 발목잡힌 가업승계 공제 늘리면 매출·고용 증가

<3000억→1조>

<52조>

<1770명>

“일부 국가에서는 각종 부유세와 상속세를 내세워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뽑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에 대한 세제와 정치적 압력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계적 갑부들은 특히 기동성이 탁월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른 나라로 재산을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자들에게 온갖 세금을 부과하려 머리를 쓰기 보다는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만큼 합리적인 세제정책을 갖춰야 할 것이다.”(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레 타계는 '상속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승계가 유력한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17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상속세가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주요 그룹들도 경영권 승계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재계와 석학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 기업 대주주들의 최고 증여·상속세율은 6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6%보다 2배를 웃돈다.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증여세·상속세 ↓ → 사업 및 투자 ↑ → 고용창출)이 될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부유했던 부모에게서 자금을 물려받아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당수의 한국 대기업은 가족기업 형태(오너 및 그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원활한 경영권 승계는 이들 대기업의 지속 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



유투이미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시 20년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

	가업상속공제 대상 현 수준 유지 (3000억 미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1조원 이하)	증가 효과	증가율
매출액	775조	828조	52조	6.8%
법인세	17.9조	18.6조	6,816억	3.8%
고용량	58,681명	60,451명	1,770명	3.0%

\*20년간 누적 경영성과

/한국경제연구원

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할까  
조회장이보유한한진칼·대한항공등 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이치는 약3600억원. 단순히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세금만 1800억원이다. 경영권을 상속받을 경우 주식이치의 30%를 가산하게 돼 있어 최종 상속세는 더 많아진다.

## 조양호 회장 주식 지분 상속세만 1800억 규모 지배구조 지각변동 예상

## 韓 과한 상속세 제도에 대기업 가업승계 어려워 합리적인 세제정책 필요

조 회장의 지분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삼남매가 나눠 받든, 조 사장 등 한 명이 상속하든 세금을 내고 나면 지분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우호지분)은 기존 28.95%에서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12.68%)는 호시탐탐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힘쓰다 보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7089억원을 투자해 CS300 여객기 10대를 도입(공시 기준)한 데 이어, 옵션으로 추가 10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었다. KB증권 강성진 연구원은 “상속인들은 한진칼로부터의 배당보다는 상속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의존하거나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그룹도 상속세가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 그룹 경영권을 승계한 LG 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꾸준히 지주회사 지분을 늘려 오다 아버지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지분 일부를 상속받아 경영권을 확보했다. 상속세(9000억원 대)는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고, 주식담보대출과 계열사 지분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중견·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부담은 더 크다.

통신 장비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4000억원이 넘는 연 매출이 1000억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회사가 침체돼 투자를 통한 실적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속세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다. 71세 고령으로 조만간 경영에서 물러날 계획인데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연 매출 3000억원 미만)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투자를 하거나 상속세 220억원을 내야하고, 투자를 안 하거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 같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4면에 계속)

#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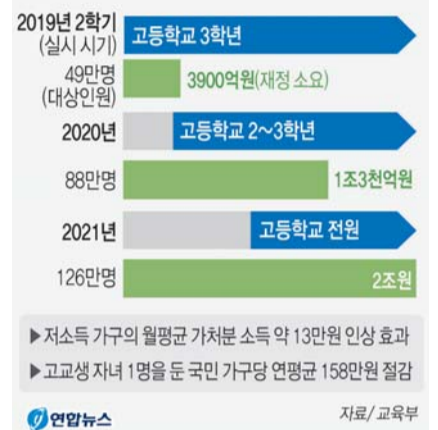
올 2학기부터 단계적 실시  
매년 2조원 예산 소요 예상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021년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올해 하반기(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해 오는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논의 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협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국가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다.

정책위는 “특히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연세 중소기업 재직자 등 40~50대 서민층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된다”며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과 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시기



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책위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또)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시원하구나’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척 작업자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청소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국민안전 예산, 추경에 반영”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연선 중소벤처기업·김연철 통일·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

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때인 오는 11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우승준 기자



9일 오전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외벽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추모하는 플래카드가 설치되고 있다. /연말뉴스

